

“하루 종일 고객 만나야”… 프랜차이즈업계, 생존공식 재편

소비 침체·임금 부담 등 한계 직면
직영점 중심 사업모델 재편 가속화
점심 등 시간대별 매장 활용 사활

프랜차이즈 업계가 고물가에 따른 소비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법제화라는 전방위적 삼중고에 직면했다. 한계에 다달은 고정비 부담을 뚫기 위해 업계는 특정 시간대에 치중했던 기존 영업 방식을 깨고 하루 종일 고객을 모으는 올데이 판매 전략과 직영 사업 다변화로 생존 모색에 나섰다.

최근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하루 종일 고객을 매장으로 유입시키는 시간대별 매장 활용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임차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는 상황에서 특정 시간대 매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수익성 개선의 핵심 열쇠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점심 매출 비중이 낮았던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버거와 닭밥을 무기로 직장인 점심 시장을 적극 파고들고 있다.

bhc는 최근 서울 강남에 메뉴·공간·서비스를 결합한 체험형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고 점심부터 저녁까지 아우르는 운영에 나섰다. 앞서 서초교대점 등에서 시



bhc는 지난 3일 서울 강남구에 플래그십 스토어 강남역점을 오픈했다.

/뉴시스

범 판매한 치킨버거는 점심 매출의 24%를 차지하는 등 쓸쓸한 성과를 거뒀다. BBQ와 교촌치킨 역시 특화 매장을 중심으로 버거와 식사 메뉴 라인업을 강화하며 낮 시간대 공백 메우기에 한창이다.

반대로 점심 의존도가 높았던 버거 브랜드들은 오후와 저녁, 간식 시장으로 영토를 넓히고 있다.

맘스터치는 치킨에 이어 피자까지 선보이며 가족 단위와 저녁 수요를 흡수하는 ‘올데이 외식 플랫폼’으로 진화를 꾀하고 있으며, 노브랜드 버거는 커피와 과일 스무디 등 카페형 메뉴를 확대해 식사 외 휴식 수요까지 흡수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와 가맹 규제 강화 속에서 사업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제너시스BBQ그룹은 최근 사상 처음으로 직영사업과 가맹사업을 분리하는 ‘각자대표 체제’를 전격 도입했다. 대법원의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필수품목 규제 강화 등 가맹사업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본사가 직접 기획·운영하는 직영점은 수익 구조를 통제하기 쉽고 가맹점 관련 이해관계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BBQ는 강남역 인근의 프리미엄 돈키호트·우동 브랜드 ‘우

쿠야 강남본점’처럼 점심 식사와 저녁 주류 수요를 동시에 잡는 플래그십 매장을 확대하며, 직영사업을 새로운 성장축이자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자구책 마련 속에서도 재반비용 상승과 규제 장벽은 외식업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되면서 인력 의존도가 높은 외식 프랜차이즈와 편의점업계의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부담은 한층 가중됐다.

설상가상으로 공정위가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만 모여도 정식 가맹점사업자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등록 단체가 광고·판촉비나 필수재료 가격 등 거래 조건 변경을 요구하면 본사는 14일 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대형 가맹 본부를 중심으로 신규 가맹 출점을 조이고 직영점 위주로 사업 모델을 재편하려는 움직임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 1면 ‘강남 집주인들…’서 계속

재건축단지 쉼법 복잡 임대차시장 불안 변수

현장에선 아직 매물이 쏟아지는 분위기 아니다.

서울 서초구반포동의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개편안 발표 이후 문의가 있었지만 집주인들이 비로 매물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며 “적어도 1~2주는 상황을 지켜보려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고령 1주택자의 부담이 특히 클 것”이라며 “세금 때문에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건 반발도 많다”고 전했다. 이어 “집주인의 살거주가 늘면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다시 오르는 악순환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쉼법이 더 복잡하다. 재건축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가 있는 반면 관리처분과 이주 시점에 따라 거주기간 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은마아파트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후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고 계속 보유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 늘어날 세금을 감당해야 한다”며 “고령 소유자 가운데는 매도를 검토하는 사람이 많다”고 귀띔했다.

가격대를 낮춰 이른바 ‘덜 뚝뚝한 한채’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은마아파트를 처분한 뒤 삼성서울병원과 가까운 강남구 일원동으로 옮기려는 수요도 나타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20일 36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일원동의 구축 아파트 전용 75~84㎡는 28억~30억원대로 은마아파트보다 가격이 약 7억~9억원 낮다.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은마주민들은 투자보다 새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살거주 수요가 많다”고 전했다.

또한 “매물이 쌓이게 되면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며 “낮은 가격에 거래가 한두 건 성사되면 그 가격이 새로운 기준이 돼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렇지만 강남 집값이 크게 내려갈 개연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증가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일정 수준의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도 “서울 핵심지역은 공급이 부족하고 대기 수요도 풍부해 매물이 장기간 쌓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임대차시장 불안도 변수다. 양 전문위원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면서 월세·판전세 전환이나 신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생채리 수습기자 of56@



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전경.

/성채리 수습기자

기후부, 산업용 전기료 지역별 차등… 인하 중심 체계개편

신규 원전건설 등 공론화 절차 예고
김성환 장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사진)이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해 인하하는 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전력의 적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격차, 송전선로 이용요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법)은 오는 9~10월 중 초안을 마련해 국회 정기국회 전 확정하고, 신규 원전 건설 여부 등에 대해 대국민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AI) 및 제조 경쟁력의 핵심인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해 중



국과의 가격 격차를 지적했다. 김 장관은 “중국은 킬로와트(kWh)당 120원, 우리나라는 180원을 쓰고 있어 중국과 산업 경쟁을 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기 가격을 안정화하면서 기후위기 시대를 돌파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숙제를 푸는 것이 기후부의 사명”이라고 진단했다.

요금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산업별 전기요금은 송전선로 이용요금, 전력망의 흐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3가지 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해 잠정적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려고 한다”며 “특히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중국과 1대 1로 경쟁하는 분야는 현재 전기요금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올리고 지방을 낮추면 수도권의 경쟁력 문제가 생길 수 있

어 최종 결정을 고려 중”이라며 “한전에 적자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한전의 부담을 최소화할 별도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8월 셋째 주 공청회 때 윤곽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갈등을 빚어온 동서울변전소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실제 전자파 영향 등 여러 가지를 논의했다”며 “대략 2달간의 시간을 두고 주민대책위와 한전 간에 최선을 다해 합의를 도출해 내려고 하며, 두 달 이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지 않겠냐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12차 전기법 9~10월 초안 마련…신규 원전 공론화 착수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법) 수립 일정과 관련해서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초안을 내고 정기국회 전에 확정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신규 원전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난 11차 전기법 당시 원전 2기에 대한 정리가 졸속이라는 비판도 있

었다”며 “12차 전기법의 토론·공청회 방식과 횡수, 주제 등을 이번 주에 정하고 다음 주부터는 대국민 공론화에 속도를 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비율에 대해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적절히 섞지 않으면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AI 시대 전력 폭증을 화석연료로 채울 수 없다면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은 전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를 석탄으로만 채울 수는 없다. 탈탄소가 핵심”이라며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빨리 늘릴 수 있느냐가 핵심 변수다. 생각하는 것보다 재생에너지 양을 빨리 늘리고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하며, 2030년까지 100GW 목표에 ‘조기’를 붙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 진입… “민생부담은 여전히 높아”

데이터처 7월 소비자 물가 동향
국제유가 하락·칩플레이션 등 영향

국내 물가 오름세가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러나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 등 물가 상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데다 민생 부담도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2.8%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5월과 6월에 3%대를 기록한 뒤 3개월 만에 2%대로

내려섰다. 미-이란 간 종전을 위한 휴전 협상에 따라 국제유가가 내림세를 보인 데 따른 국내 물가 하락으로 풀이된다.

국내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이 15.5% 올랐지만 전달인 6월(24.7%)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축소됐다. 휘발유(12.6%)와 경유(21.5%), 등유(20.5%)는 여전히 두 자릿 수 상승을 나타냈다.

또 이른바 ‘칩플레이션’ 영향으로 컴퓨터(25.1%)와 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22.5%) 가격이 크게 뛰었다. 축산물(4.4%)과 수산물(3.9%)의 상승 폭도 비교적 컸다. 국산소고기(5.7%), 쌀

(7.9%), 수입소고기(8.7%), 달걀(7.5%), 고등어(7.0%) 등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여기에 국제항공료(21.7%) 고공행진이 이어졌고 보험서비스료(13.4%)와 해외단체여행비(20.0%), 자동차수리비(6.1%) 등도 크게 올랐다.

반면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은 1.0%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농산물 가격도 2.2% 내렸다. 전기·가스·수도는 0.4% 올랐다. 공공서비스와 개인서비스는 각각 1.4%, 3.5%, 외식 가격은 2.6%, 외식 제외 서비스는 4.1% 올랐다.

국가데이터처의 이두원 경제동향심의관은 “국제유가와 환율의 하락, 최고가격 인하 등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축소됐다”며 “기상여건 악화로 농축산물 수급 불안 등 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7월 물가가 2%대로 재진입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행일 재정경제부 제1 차관은 “상승세 완화에도 그간의 물가 상승이 누적돼 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민생 부담이 여전하다”며 “중동전쟁 불확실성과 통신비 기저효과, 폭염 등 이상기후 영향, 식품가격 등 물가 상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